감 사 원

심 사 결 정

분 류 번 호 2016-심사-966

제 목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A

서울특별시 ■구

B

충청남도 □시

C

충청북도 ■시

D

충청북도 ■군

대리인 ■■■노무사 담당 공인노무사 E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2010년 진폐로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2015년 사망한 F(이하 “재해자”라 한다)의 자녀인 청구인들이 2016. 1. 15. 처분청에 유사 임금 조사범위를 충청권으로 확대하여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증액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6. 2. 23. 재해자가 소속된 사업장 소재지역이 아닌 지역의 임금자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처분청이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을 조사하여 재해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한 것은 그 범위가 좁아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조사범위를 충청권역까지 확대하여 조사한 후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유사임금에 대한 조사범위를 재해자가 소속한 사업장 소재지역이 아닌 광역단위로 확대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재해자는 ㉠㉠개발주식회사에서 1983년부터 1985년까지, ㉡㉡탄광에서 1986년부터 1987년까지 근무하였고 2010. 10. 6. 진폐를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2015. 7. 21. 사망하였다.

2) 재해자가 2013. 7. 24.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산정하였던 기존 평균임금을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2013. 4. 3. 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13-12호, 이하 “공단 지침”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재해자 본인에 대한 소득자료가 없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 등에 따른 평균임금(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재해자가 근무한 사업장(㉡㉡광업소)의 동종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였다.

3) 공단 지침의 특례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표]와 같다.

[표] 특례 평균임금 산정방법(공단 지침 발체)

<산재보험법령 특례 평균임금 산정방법 변경 연혁>

적용시기	특례 평균임금 산정 기준점 및 산정방법	통계자료
'00. 7. 1.~ '10. 11. 20.	-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된 금액	매월노동통계또 는사업체임금근 로시간 조사

<특례 평균임금 산정에 따른 업종 및 규모 적용 변경 연혁>

적용시기	특례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른 업종 및 규모 적용	비고
'00. 7. 1.~	-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업종 및 규모가 동일한 사업 중 당해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금액 적용	규정

4) 재해자의 자녀인 청구인들은 2016. 1. 15.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업장의 임금자료를 제출하면서 지역을 확대하여 임금자료를 다시 조사한 후 기존 평균임금을 증액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의 임금자료는 재해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자료라는 이유로 2016. 2.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 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재해자의 평균임금 조사범위를 충청권역까지 확대하여 조사한 후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

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4항에는 진폐 등의 경우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 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재보험법상 특례 평균임금)으로 하고,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으로 하되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공단 지침을 마련하고, 재해자

본인의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동일한 지역(시, 군)에 소재하고 업종 및 규모가 동일한 사업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공단 지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제 생활임금의 반영이라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점, 평균임금을 조사할 지역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 사건의 경우 우연히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켜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나 반대로 다른 재해자들의 평균임금을 감소시킬 수도 있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자의 임금자료를 조사할 지역범위를 넓게 확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 3 . 21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6 (생략)

○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⑤ (생략)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塵肺)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⑦~⑧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① (생략)

② 법 제3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 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

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이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⑤~⑥ (생략)

□ 「근로기준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8. (생략)

② (생략)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